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된 법적 쟁점 및 사례 분석 보고서

1. 서론

디지털 플랫폼의 글로벌화로 인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. 그러나 결국 국외 이전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,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국가 간법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. 본 보고서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법적 생점을 이해하고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판결을 분석한다.

2.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법적 쟁점

- A.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국외 이전 제한
 -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로 이전 시에는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요구된다.
 - 국외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계약 체결이 필수적이다.

B. 주요 쟁점

- 정보주체의 동의 유효성: 단순한 약관 동의로 충분한가?
- 이전 국가의 보호 수준: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법적 보호 수준이 낮다고 평가될 경우, 이전 자체가 제한될 수 있음.
- 통제권 상실 문제: 국외 이전 후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임.

3. 사례 분석

- A.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연동 사건
- i. 사건 개요
 - 기간: 2018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6년간
 - 규모: 약 4045만 명, 총 542억 건의 개인정보가 알리페이에 이전됨.
 - 문제점: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국외 이전이 이루어졌고 고지도 불충분했음.

ii. 위반 내용

-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위반: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필요함.

- 신용정보법 위반: 금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동의 절차 생략
- 최소수집 원칙 위반: 애플 결제 관련 정보만 필요한데 전체 이용자 정보가 이 전됨

iii. 행정처분 결과

기관	대상	처분 내용
개인정보보호위원회	카카오페이	과징금 59억 6800만 원, 시
		정명령, 공표 명령
개인정보보호위원회	애플	과징금 24억 500만 원, 과태
		료 220만 원
금융감독원	카카오페이	추가 과징금 약 150억 원 예
		정
총합	카카오페이	약 233억 원의 과징금 부담
		예상

iv. 주요 쟁점

- 알리페이의 NSF 점수 산출을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넘긴 점
- 애플 기기 미사용자의 정보까지 포함된 점
- 알리페이의 중국 내 법적 구조로 인해 정보주체 통제권 상실 우려
- 카카오페이의 주장: "업무 위수탁"이라 동의 불필요 vs. 개보위 판단: "제3자 제공"으로 동의 필요

4. 관련 법률 조항 요약

법률 조항	내용	핵심 생점
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	국외 이전 시 고지 및 동의	동의의 명확성, 보호 수준 검
	필요	토
제28조의9	국외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	계약 체결, 기술적 보호조치
	감독 책임	
제39조의12	과징금 및 시정명령 가능	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

5. 종합적인 의견 및 평가

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단순한 기술적 연동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국가 간 법적 충돌을 수반하는 복합적 윤리 및 법적 문제다. 특히 중국과 같이 국가가 기업의 데이 터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단순한 제휴만으로도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.

카카오페이 사례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제휴를 추진할 때 법적 리스크를 간과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. 알리페이와의 협업은 기술적으로는 편리했지만, 법적 및 윤리적 고려가 부족했다.

향후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:

- 정보주체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고지를 제공할 것
- 국외 수탁자의 법적 및 기술적 보호 수준을 사전 평가할 것
-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UI 및 절차를 마련할 것

6. 결론

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이 교차하는 지점이다. 카카오페이 사례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제휴를 추진할 때 반드시 법적 및 윤리적 기준을 내재화해야 함을 보여준다. 향후 관련 법률의 강화와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.